

# 4당 패스트트랙 '돌파구'

### 바른미래, 공수처 기소심의위 추가안 제시...민주당 수용 평화당 반대 기류...한국당, 닷새째 패스트트랙 육탄 방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날 내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육탄방어에 나서고 있는데다 평화당에서도 두 개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기류가 강해 과연 이날 중으로 처리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

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 추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두 개 법안을(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제안한 권은희 의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 중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당·평화당·정

의당) 가운데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법안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동의된 건 아니다. 다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점심시간부터 협상을 했고, 협상 결과를 의총 직전 최고위에 보고해 함께 논의한 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권 의원이 설치자는) 기소심의위의 의결 권한과 강제

력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오늘이 건이 안 된다면 개혁입법을 우리 생각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어야 한다.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을 추진한 민주당은 이날 내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은 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총동원,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밤 다시 한 번 여야 4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해산 촉구' 靑 청원 50만 돌파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결핍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9일 오전 7시 기준 30만8000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7시까지 5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급증하자 보수성향 국민들이 더

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개하며 '맞팔'을 놓고 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좌파독재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민주당 해산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등 하루에만 수십여 개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록됐다. 민주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개의 청원에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 오후 3시 현재 가장 많은 청원자를 얻은 국민청원은 1만 7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제1야당에 이어 집권 여당 해산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면서 하루 중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극심한 혼잡을 빚어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4당 vs 한국당 고발 전쟁

### "한국당 회의장 점거 무관용" 민주당·정의당 71명 고발 한국당, 민주당·정의당 맞고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면 충돌의 후폭풍으로 무더기 고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 놔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다"며 "반드시 정산할 사람은 정산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 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용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고발전'에 가세,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측 17명에 고발장을 낸 한국당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문재인 정권의 겁박과 위협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했던 법조인 출신으로, 당력을 기울여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을 지켜내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 당 원내사령탑을 포함한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제각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어 피고발인 수가 100명이 넘어서는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박지원 에타게 찾은 이유는?

### 지도부,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주말 내내 소재 파악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에타게 찾은 소동이 벌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자유한국당의 육탄 방어로 무산되자 마지막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갔다. 평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처리가 어렵겠다. 목포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입장을 듣고서다.

이후 주말 내내 박 의원의 핸드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질문은 "어디에 있는냐"는 것이었다. 박 의원이 목포에서 상경하는 것은 곧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로 이어지는 신호탄

이 되기 때문이다.

주말 장외 집회에 나선 한국당으로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있다면 다시 국회로 급히 회귀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동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7-28일 주말과 휴일 동안 목포와 광주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당 지도부로부터 "사개특위를 소집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박 의원이 28일 오후 광주로 이동한 것과 관련, "이날 저녁 여야 4당이 사개특위를 개최하지 않느냐"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공식 선임

### 내달 14일 정식 취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공식 선임됐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양 전 비서관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장식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전 비서관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않았다.

양 전 비서관은 다음 달 14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양 전 비서관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원은 내년 4월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중추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 전 비서관의 복귀가 '친문들의 리그'를 만들 원인에 공식 선임됐다.

문 인종'을 받은 청와대 참모들이 속속당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이해찬 대표가 경선을 통한 시스템 공천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할 확률이 그리 많지 않다"며 "인위적인 공천은 받 불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J6 10 point  
J5 8point  
J3 6point  
J2 5point  
J1 4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